

수칙①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탈의,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여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수칙②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C변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하였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칙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 F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되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고객도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촬영중

CCTV 설치안내

설치 목적 및 장소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주차장, 승강기 등 단지내설 주요시설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관리사무소장 TEL:000-0000-0000



음식점



주차장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열람 요구

10일 이내 통지



CCTV
운영자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